

##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협약제도 추진방안

임 형 빈 / 한 상 옥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hbyim@cni.re.kr

hansw@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자협약제도의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외 사례, 중앙정부의 투자협약제도 추진 방안을 살펴보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CONTENTS

1. 개요
2. 해외 관련 제도 검토
3. 투자협약제도 도입 및 적용 방안

### 요약

-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는 재정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에 관한 제도로 중앙과 지방간 재정 분권과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됨
- 우리나라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는 2003년 시행된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음
- 해외 사례로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와 영국의 지역협상제도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모색함
  - 프랑스의 계획계약 제도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 실행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 분권 강화에 따라 지역의 정책 분야도 넓어지고 있음
  - 국가와 지자체간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과 재정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프랑스는 지역사업 총괄사무국((SGAR)에서 사업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은 지자체 지역기업 협의체(LEP)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시 민간의 참여와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음
- 투자협약제도의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적용 가능한 방안과 협약 지침(안)을 제시함
  - 내용으로 투자협안 대상 선정, 사업 이행을 위한 제도와 조직 구축,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 기업 등 민간영역과의 협력 강화등을 제안하였음



# 01 개요

## 1. 배경 및 목적

-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2007. 3. 30)하고, 이에 근거하여 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 제1단계 사업(2008~20020)에는 8개 시·군을 선정하고,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 사업의 대상지역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임
  - － 제1단계 사업은 총 198개 사업, 10,847억원(국비 2,743억원, 도비 3,578억원, 시군비 등 4,526억원)이 투자되었음
- 지역균형발전 제2단계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며, 지원 대상지역은 기존의 8개 시·군에 예산군이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임
- 한편,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책임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중앙과 지방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추진하고,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충청남도가 저발전지역에 투입하는 균형발전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와 관련한 제반 요건을 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안정적 추진을 위해 투자협약제도의 적용 방안을 제시코자 함

## 2. 투자협약제도

### 1) 개요

-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는 재정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에 관한 제도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논의가 시작됨
  - 재정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서 재정의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재정활동의 성격에 따른 구분인 수입과 지출활동 중 지출활동 측면에 관한 제도로써 ‘협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제도를 말함(김찬준 외, 2019)
- 우리나라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는 2003년 시행된 국토기본법에서 국토계획과 정책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함
  - 프랑스 계획계약제도 등 해외의 제도를 반영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투자분담, 사업기간 등을 공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됨(국토, 2002)
-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협약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실효성을 강화하였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지역발전 투자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주도적·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중앙정부(다부처와)와 협약을 맺으면 중앙에서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포괄보조로 지원함
  -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 범위에서 지자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지자체가 최적 조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중앙부처가 이를 협약 기간 동안 지원(재원 등)하

는 방식임

## 2) 추진절차 및 범위

### ■ 추진절차

-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협약안을 중앙정부에 제출 → 중앙정부 각 부처의 검토 → 수정 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 순으로 진행(균특법 시행령 제19조)

<표 1>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절차(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9조)

단계	주체	내용
1단계: 지침송부	균형발전위원회	협약운용지침 마련 및 중앙·지방송부
↓		
2단계: 협약안 제출	시·도지사	협약안 제출
↓		
3단계: 관계부처 검토	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협의)	협약안의 관계 부처 및 균형발전위원회 송부 의견 제출
↓		
4단계: 최종안 제출	시·도지사	사업협약 후 최종안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
↓		
5단계: 심의	균형발전위원회	협약체결안에 대한 심의
↓		
6단계: 체결	균형발전위원회- 관계부처-시·도지사	협약 체결안 수정 후 협약 체결

## ■ 구속력과 사업 범위

- 투자협약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로는 균특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이 명시되어 있으나, 적용범위와 구속력에 관한 사항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음(정재희, 2018)
  - 따라서, 국가계약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중앙과 지방의 행정계약과 국고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의 관계 설정 등 보다 명확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사업 범위(대상사업)는 2005년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①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② 계속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협약에 적합한 사업의 유형으로 혁신주도형 발전사업, 고용창출사업, 광역적 파급효과 및 전 후방 연계효과가 큰 사업을 제시한 바 있음
-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기존의 단년도 일회성 위주의 사업에서 지자체에서 수립한 최적 계획을 중앙의 예산을 계약계획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역간 공동사업, 다년도 다부처 다지역 연계사업으로 추진됨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8.2),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p.35.

<그림 1> 계획계약제도 운영체계

-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투자협약제도(계획 계약)의 적용 사업 기준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계획 상에서 비전과 3대 전략 9개 과제를 제시하여 지역에서 사업 발굴시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 발굴을 유도함
  - 시범사업의 예를 살펴보면 강소도시권 육성, 산단 구조고도화, 해안권 연계 협력, 농촌 신활력 플러스 등임
- 지역별 공정배분, 포괄보조, 다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지자체 자율적으로 사업 발굴하고 지역위 중심으로 컨설팅 수행하여 사업이 선정됨
  - 1개 부처 고유사업이나 기존 공모사업과 유사한 사업, SOC 등 대단위인프라 개발사업 등은 제외

## 02

## 해외 관련 제도 검토

### 1. 사례 검토<sup>1)</sup>

#### 1) 프랑스 계획계약 제도

- 프랑스의 계획계약 제도는 지자체대표(지자체장, 지역의회 의장 등)<sup>2)</sup>와 중앙정부간 계약 및 지역별 지원을 위한 수단임
  - 국가와 지역간 공통사업에 대해 재정투자 등을 약속하고 일정 기간(5-7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Contrats de plan) 으로 1982년 지방분권 이후 1984년부터 시행됨
- 계획계약 체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과 지역간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을 통해 안정적 재원확보
  - 계획계약제도(Contrat de plan État-région, CPER)는 ‘데페르(Defferre)법’에 따라 1982년 지방분권을 실시하면서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실행 강화를 위하여 도입됨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간의 불일치 조정, 국가와 지방의 우선 사업에 대한 조율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수단임
  - 계획계약은 6년의 기간 동안 국가와 레지옹이 합의한 우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레지옹이 재정을 분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목적은 ① 국가에서 레지옹으로 지출되는 각 부처의 일부 재원을 계획계약 내로

1) 김찬준 외(2019), 한국형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 연구, 정재희(2018),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방안,의 일부 내용을 정리함

2) 프랑스의 행정체계 :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시 읍 면에 해당하는 코뮌 → 도 보다는 작은 규모의 데파르트망 →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레지옹(본토 13개)의 3단계로 구성됨. 레지옹에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레지옹 관선지사(프레페, prefet)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관할하고, 레지옹 의회의장이 단체장 역할 담당



일원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을 지역에서 일관되게 집행, ② 정부와 레지옹이 정책을 공동 생산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공하고 지역의 주체들을 동원하며 특히 산악, 강 유역 등 여러 지역이 연관된 다지역 간 문제 해결구조 마련, ③ 다년간 계약으로 재정지원구조 안정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차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의 지속성 보장 함

- 국가와 레지옹이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가와 지역(레지옹 등)이 그 방향성과 내용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사업의 목표와 재정지원 수단을 국가와 레지옹이 협상하고, 이를 통해 국가-레지옹이 5~7년간 합의한 기간 동안 국가와 지자체의 발전에 기여할 '협약'을 공식화 함
-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분산을 추진하는 법과 제도와 관계가 있음
  - 프랑스 지방분권 제1기에는 CPER 제1차(1984~1988), 제2차(1989~1993), 제3차(1994~1999), 제4차(2000~2006)가 해당되며, 지방분권 2기에는 제5차 CPER(2007~2012), 지방분권 3기에는 제6차 CPER(2015~2020)이 해당되어 분권의 추진방향에 따라 내용의 변화가 발생함

<표 2> 프랑스 계획계약제도(CPER)의 기간별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주요 사업 내용
지방분권 1기	제1차 CPER (1984~1988)	국가 산업 구조조정, 국가 기간도로망 건설 사업 - 교통인프라 구축, 기술혁신 센터 중심의 경제정책이 17%, 대학 및 직업교육체계 교육정책
	제2차 CPER (1989~1993)	중공업 지역의 재편, 농촌 지역의 변화, 근접한 도시 간 계획, 대학개혁 프로그램(Plan Universit é 2000),도시낙후지역재생사업(DSQ)
	제3차 CPER (1994~1999)	레지옹 차원의 국가전략 강조, 협약의 주 대상으로 레지옹의 역할 강조
	제4차 CPER (2000~2006)	전략적 협약 목표, 프로젝트 중심, 협력 유연성 확대 - 지속 가능한 개발, 정보화 기능, 일자리, 사회연대
지방분권 2기	제5차 CPER (2007~2012)	지역 분권의 확대로 지자체의 지역 행정 기능 강화 - 국가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영토적 통합 - 유럽 전체의 발전계획과 일관성 유지
지방분권 3기	제6차 CPER (2015~2020)	국가-레지옹-메트로폴리스 중심 경제체계로 추진 - 8개 분야 중심으로 추진(일자리, 고등교육·연구·혁신, 생태 및 에너지 전환, 디지털 기술, 교통, 미래산업, 혁신, 국토개발)

## ■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 국가-레지옹 계획계약 실행을 위한 레지옹 단위의 거버넌스는 정책 기구와 실행 기구로 구성됨
- 정책 기구는 계획계약의 방향, 세부 사업의 정의, 프로그램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계약 집행을 연간 결산 승인 등을 수행함
- 실행 기구는 계획계약의 우선 과제별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기관과 재정분담 기관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획계약에 정의된 전략적 방향이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기획위원회와 함께 업무를 수행함

## ■ 지역사업 총괄사무국(SGAR)의 기능·역할

- 레지옹의 지역 경제발전계획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추진 주체로서 지역사업 총괄사무국(Secretaires generaux pour les affaires regionales, SGAR)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음
  - ① 국가의 지방 업무 활동을 조율하고 데파르트망 업무와의 유기적 결합 관리
  - ② 국가 정책과 지역에 관련된 유럽연합 정책의 집행을 일관성 있게 관리
  - ③ 연구·평가·정보통신 기술 활용 분야에서 국가의 지방업무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정보업무와 지방에서 공공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정보통신사업 실행 조정
  - ④ 지방에서 국가의 업무 간 협력 기능을 실행하고 조직을 조율하며 활성화하고, 분산화된 행정 업무 및 부동산과 관계된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 조정하며 상호협력 사업 촉진 및 개발
  - ⑤ 지방 행정위원회(comité de l'administration régionale, CAR)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
  - ⑥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은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을 준비하기 위해 부처간 조정 작업 수행
-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의 조직은 경제, 사회, 법률, 재정, 환경, 도시개발계획,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의 디지털 개발, 디지털 기업, 도시 정책 등을 촉진, 활성화 및 조정하는 부서 등으로 구성

- 지역사업 총괄사무국 내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는 지역개발국이며, 지역개발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 ① 지역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수단을 관리, ‘지역개발정책의 촉진과 조율’ 관련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도, 데파르트망 지사와 협력하여 군사기지 전환 조치를 실행하여 지자체에 배분된 보조금을 관리
  - ② 계획계약의 재정 관리를 담당하며 지자체의 수단과 지역에 대한 투자역량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함. 특히 지자체의 외부 사업을 목적으로 제출된 보조금 요청의 심리 등을 수행함
  - ③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을 준비하기 위해 부처간 조정 작업을 담당하고, 계획계약의 우선 과제에 적합한 세부 사업을 기술적, 전략적 차원에서 다룰 때 교육청, 환경청, 도시공사, 주택공사, 철도청 등 레지옹에 분산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을 동원할 책임이 있음

## 2) 영국 지역협상 제도

- 분권형 지역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지역민관협의체(LEP)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 지역기업 협의체(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는 협상의 근거가 되는 지방주권법(2011년), 도시및 지방분권법(2016년)에 따라 추진됨
- 중앙정부간 협상을 통해 지원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지역성장협상(Local Growth Deal) 분권협상(Devolution Deal)을 2014년 도입하여 지역발전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음
  - 기존의 광역권 단위의 경제 지역개발을 담당하던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를 폐지하고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를 설치하여 광역경제권 중심에서 도시와 도시권에 기반을 둔 지역개발로 전환됨
- LEP의 설립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사회, 시민, 기업으로 권한을 이동하도록 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개혁프로그램과 재원을 마련함
  - 1999년 설립 이후 지역개발기구의 역할을 담당하던 RDA는 관료적 성격이 강한 중앙정부의 특수법인인데 비해, LEP는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구성하는 지역색이 강한 분권적 조직임

- RDA는 광역적 범위를 관장하는 조직이었으나, LEP는 도시권에 설치되는 등 공간적 특성에도 차이가 있으며, 지자체는 복수의 LEP에 가입이 가능함
- 도시권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CA)는 둘 이상의 지방정부 요청에 따라 국무장관이 결정하는 법적 조직으로 각 도시의 대표와 시장으로 집행부를 구성함
  - CA는 경제 및 지역개발, 도시재생, 교통 등 광역정책을 담당함
- 이러한 조직을 중심으로 한 협상제도를 통하여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형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협상제도는 지방정부가 성과달성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앙 정부에 제안하여 재정을 지원받는 것으로 도시권협상(City Deal), 지역성장협상(Local Growth Deal), 분권협상(Devolution Deal)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 ■ 도시권협상(City Deal)

- 도시권협상은 중앙과 지방정부 혹은 LEP 사이에 체결하는 재원 및 의사결정 권한에 관한 지역맞춤형 협상으로 2012-2014년 기간동안 진행되었으며 기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제1기(wave 1) : '12년 런던 외곽 8개 대도시권(core cities)
  - 제2기(wave 2) : '14년 18개 도시권(1기 8개 대도시권 다음 규모의 도시권 및 인구증가율이 높은 도시권)
- 도시권협상이 지향하는 목적은 경제성장정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와 규제완화, 도시권의 거버넌스 구조 강화 등 임
- 지원방안으로 제1기 및 제2기 도시권협상을 진행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은 다양한 권한이양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협상의 메뉴에 포함됨
  - 통합 투자재원 제공, TIF(조세담보금융) 허용, 지방세 확대, 지역교통사업에 대한 권한강화 및 재정지원, 지역재원의 선투자에 의해 증가하는 국세의 환급제도 등

## ■ 성장협상(Growth Deal)

- 성장협상은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LEP가 체결하는 협약제도로서, LEP가 수립하는 전략경제계획(Strategic Economic Plan)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지원규모와 사업을 결정함
  - 전략경제계획은 성장계획(growth plan),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 전달계획(delivery plan)으로 구성되며 2014-2017년 기간 동안 전국 39개의 LEP에서 성장협상 체결됨
- 중앙정부와 성장협상을 통하여 지역성장기금(Local Growth Fund, LGF)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투자 계획을 수립함
- 여러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구성된 연간 20억파운드 규모의 기금으로 LEP는 중앙정부와 성장협상을 통해 자금지원의 규모와 사업을 결정함

## ■ 분권협상(Devolution Deal)

- 분권협상은 경제성장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권한이양을 촉진하는 협상임
-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34개의 분권협상이 제안되어 맨체스터를 비롯한 10개 지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의에 도달
- 분권협상에는 과거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던 정책집행 및 재정투자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
- 도시권협상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협상을 체결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지원 분야는 교통, 비즈니스지원, 기술교육 3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재정집행에 관한 권리이양을 포함함
- 대부분의 분권협상에는 고용지원, 주택 및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이양이 포함되며, 일부 분권협상에는 보건, 사회복지, 범죄대책, 경찰, 소방,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이양도 포함됨

## 2. 시사점

- 프랑스와 영국의 투자협약제도는 지역 인프라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되는 지역 인프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
- 지역 분권을 근거로 재정 분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부합한 최선의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관련 제도들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법 제도 시스템 구축] 지방 분권이 확대됨에 따라 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재원 마련의 근거가 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지방 분권 강화와 그에 따른 재정 분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현안과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계획이 추진되고 집행 가능한 재정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지원 조직의 경우 프랑스는 정책 기구와 실행기구가 분리되어 운영중이며, 영국의 LEP는 지역내 기업들의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과 협약,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프랑스 경우에도 지방 분권 추진에 따라 재정 분권도 확대 되고 있으며 계약 계획의 분야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되고 있음
- [사업 추진 분야] 국가 계획상 전략적인 비전과 목표, 분야를 설정하여 추진함
  - 프랑스의 계획계약은 국가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방 분권 강화에 따라 계획계약의 분야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책 분야는 산업경제, 지역개발 관련 인프라, 교육, 환경 등으로 넓어 지고 있음
- [지원 조직과 규제 완화]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 분야 확대에 따른 지원 조직 구축과 지역 재정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 프랑스의 계획계약 제도 추진을 위한 조직인 지역사업 총괄사무국(SGAR)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니터링과 사업 관리를 실시함
  - 지역사업 총괄사무국(SGAR)은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을 준비하고 부처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 기획 역할을 수행함
  - 지역의 사업 추진 분야 확대와 함께 재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 제도를 개편하여 지방세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지역 중심의 계획 수립]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수평적인 협상의 관계에서의 지역 공공재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 시설의 공급시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시설을 중앙정부와 협력적 관계에서 계획 수립 가능
  - 계획 수립단계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지역계획 수립과 집행 측면에서 안정적인 계획 추진과 일관성 유지 가능

# 03

## 투자협약제도 도입 및 적용 방안

### 1. 적용 방안

- [추진 근거 마련] 균형발전 투자 협약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

조항	본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u>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u>(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제19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p>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p>



조항	본문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p> <p>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p> <p>⑦ 시·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 사업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li> <li>2.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li> <li>3.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li> <li>4.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li> <li>5.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li> </ol>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p>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평가)	<p>① 도지사는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b>(NEW)균형발전 투자협약 체결안을 제출하고</b>,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도지사는 <b>(NEW)시장·군수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b>, 매년 균형발전사업 <b>(NEW)투자협약과</b>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본문
제8조 (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시행규칙 제2조 (균형발전사업의 범위)	제2조(균형발전사업의 범위) (NEW)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2.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3.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4.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NEW) ② 개발계획·시행계획에 수립된 사업은 투자협약 대상사업으로 본다.

- [투자협약 운영 지침 마련] 균형발전사업 투자협약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지침 마련 필요
- [협약 대상 선정] 균형발전 기본계획, 개발계획에서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 중심으로 투자협약 대상을 설정하거나 모든 사업을 투자협약 대상으로 설정
  - 프랑스 계획계약제도의 중앙정부의 전략적 분야를 반영한 계획 수립
  - 우리나라 국가 균형발전계획 상 설정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및 협약
  - 필요시 균형발전사업의 협약 제외대상을 제시 할 수 있음
- [사업 이행 제반조건 근거 마련] 지역 사업의 실행력 강화와 지역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협약을 위한 지역차원의 제도와 조직 구축 필요
  - 투자협약의 기준은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를 준용하여 투자협약제도를 운영하고 세부 운영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운영함
  - 투자협약제도를 위한 시군별 계획의 가이드라인과 비전은 충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함
  -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프랑스의 지역사업 총괄사무국(SGAR)의 사례와 같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기구를 설치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투자협약의 집행 관련, 사업 협의 등을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함

-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다부처, 다지역 연계 사업의 추진 확대 방안 모색
  - 인구 감소 대응, 지역의 전략 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업의 투자를 위한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또한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고 복잡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실행부서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도 투자협약시 인센티브를 부여
- [지역의 기업등 민간영역과의 협력 강화] 영국의 LEP의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 시민, 기업과의 협력과 연계 강화로 지역 발전의 수단과 관점 다양화
  - 지역개발 계획 수립시 관 중심의 계획 수립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와 민간 기업의 참여 기회를 마련함

## 2. 균형발전 투자협약 지침(안)

### 제1장 총 칙

####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〇〇조 제〇항 및 시행규칙 제〇조 제〇항에 따라 투자협약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협약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1-2.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〇〇조 제〇항에 따라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〇〇조 제〇항에 따라 균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충청도지사가 정한다.

#### 제2절 적용범위

1-2-1. 이 지침은 투자협약의 대상, 체결 절차, 이행, 변경, 해약, 지원 등에 적용한다.

1-2-2. 투자협약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군간 협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절 기본원칙

1-3-1 협력의 원칙 : 협약 당사자는 투자협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노력한다.

1-3-2 자율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은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균형발전 계획 또는 사업이며,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1-3-3 전략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은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〇〇사업으로 한다.

1-3-4 구체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사업규모, 투자비용, 사업기간, 자원조달 방법,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한다.

## 제2장 협약의 대상

### 제1절 대상

2-1-1. 투자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〇〇조 제〇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례 제〇〇조에 따른 도·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1-2. 투자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충청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비전, 전략, 시군별 발전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2-1-3. 시장·군수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〇〇조 제〇항에 따라 투자협약 체결 대상사업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부처’라 한다)의 범위 : 복수의 부처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일 것

(2)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 지역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삶의 질 개선 등 사업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3~5년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일 것

(3)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일 것

(4)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 : 사업주체가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사업, 토지 확보 등 사전절차가 원만히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예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자체 관라운영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일 것

2-1-4. 그 밖에 지역 간 시군간 공동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등도 투자협약의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다.

### 제2절 제외대상

2-2-1. 다만, 다음의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른 지원제외 사업 : 예산 중복신청 금지 사업,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

(2) 균형발전과 무관한 사업 : 상업시설 등 영리시설, 단순 행사비 지출, 특정 개안단체기업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 균형발전과 관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

(3)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된 사업

(4) 주민 반대민원이 심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5) 그 밖에 균형위 심의 결과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 제3절 협약에 대한 자원 조달

2-3-1. 투자비용은 투자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시군간 일정비율을 부담하되,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부담할 수 있다.

2-3-2. 충남도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2-3-3. 협약사업을 각각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장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 제1절 추진 절차

### 3-1-1. 투자협약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협약안 마련 (지자체 장)	
↓	
협약안 제출 (지자체 → 균형발전담당관)	
↓	
협약안 관계부서 및 예산담당관 송부 (균형발전담당관)	즉시 송부
↓	
협약안 검토의견 균형위 제출 (관계부서·예산담당관 → 균형발전담당관 → 균형위)	14일 이내
↓	
종합 검토의견 작성 후 체결안 작성 요청 (균형위 → 균형발전담당관)	14일 이내
↓	
시군과 협의하여 체결안 마련 * 사군은 의회 의견수렴 (균형발전담당관)	14일 이내
↓	
체결안 심의의결 (균형위)	
↓	
체결안 관계부서 송부 (주관부서)	
↓	
협약체결 (균형발전담당관, 관계부서 - 지자체)	

## 제2절 협약안 작성 및 제출

3-2-1. 협약안 작성 주체는 지자체 장으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지자체 장이 투자협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균형위에 제출해야 한다.

- (1) 본문
- (2) 체결조건
- (3) 부속서류('3-2-2' (2)호부터 (5)호까지를 부속서류로 한다)

3-2-2. 시장·군수가 투자협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균형위에 제출해야 한다.

- (1) 투자협약(안)
- (2) 공동추진 협약서(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시군간 연계협력사업))
- (3) 사업계획서

#### (4) 기타 필요서류

3-2-3.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투자협약(안)’을 참조하여 협약안을 작성하되, 그 구성과 내용 등은 지역 실정 및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3-2-4.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그 구성과 내용 등은 지역 실정 및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2-5. 협약안의 체결조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협약대상사업의 내용과 범위
- (3) 충청남도 책무
- (4) 시군 책무
- (5)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 (6) 협약의 효력
- (7) 기타

3-2-6. 투자협약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 (1)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 (2)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관 기초지자체가 주관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도에 제출한다.

#### 제3절 체결안 마련 및 협약 체결

3-3-1. 관계부서 및 예산담당관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균형발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관계부서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관계부서 및 예산담당관은 협약사업에 대하여 기존 보조사업과의 중복여부, 법적 선결요건, 갈등요소, 기존 정책과의 조화성 등을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균형발전담당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3) 관계부서는 필요시 소관 사업을 협약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3-3-2. 균형발전담당관은 균형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균형위는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14일 이내에 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을 균형발전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3-3. 주관부서는 다음을 감안하여 균형위가 정한다.

- (1) 협약안을 제출한 지자체 장이 요청한 관계부서
- (2) 주된 목적을 가진 단위사업의 소관 부서
- (3) 소관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

3-3-4. 균형발전담당관은 체결안 작성시 협약안을 제출한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체결안을 작성하고, 균형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약안을 작성하기 전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3-5. 균형발전담당관은 균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이 확정되면 관계부서 및 예산담당관에게 체결안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3-3-6. 균형발전담당관, 관계부서 및 시장·군수는 공동으로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제4장 지역발전투자협약 이행

##### 제1절 협약의 이행

4-1-1.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시 적용되는 다음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제2절 협약 이행상황 점검

4-2-1. 균형발전담당관은 '투자협약 추진실적 보고'에 따라 협약사업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균형위에 보고해야 한다.

4-2-2. 균형위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 및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2-3. 균형위는 협약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필요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관계부서 및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5장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 및 해약

##### 제1절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

5-1-1. 균형발전담당관, 시장·군수는 다음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균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 (1) 총사업비 또는 사업면적이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 (2) 협약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다만, 단순 이월재이월은 제외한다)
- (3) 협약 당사자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균형위에 요청하는 경우

5-1-2. 균형발전담당관 또는 시장·군수는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당사자 간 합의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균형발전담당관은 '투자협약 변경보고'에 따라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균형발전담당관 에 제출하고, 균형발전담당관은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균형위에 통보한다.

5-1-3. 협약 내용의 변경으로 예산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관계부서 및 시장·군수는 미리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절 투자협약 해약

5-2-1. 투자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균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약할 수 있다.

5-2-2. 협약의 해약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될 수 있다.

#### 제6장 협약에 대한 지원

6-1-1. 균형위와 균형발전담당관은 협약 체결 당사자 간 협약조정 또는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합동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규정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6-1-2. 시장·군수는 협약사업의 추진에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6-1-3. 균형발전담당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투자협약 사업 관련 컨설팅 총괄
- (2) 투자협약 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 (3) 투자협약 사업성과 평가
- (4) 투자협약 관련 제도개선 연구
- (5) 그 밖에 균형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7장 행정사항

7-1-1 균형발전담당관은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참 고 자 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005,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운영지침.

국토연구원, 2002, 지역발전협약제, 국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1,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김찬준 외, 2019, 한국형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 연구, 산업연구원.

이원섭, 201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방안 국토정책 브리프(319).

정재희, 2018,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2019.

지역발전위원회, 2018.2.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